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044
----------	------

발의연월일 : 2025. 3. 18.

발 의 자 : 한준호 · 김문수 · 박용갑  
이건태 · 복기왕 · 박균택  
정준호 · 허성무 · 정태호  
이용우 · 강유정 · 박상혁  
김원이 · 김성희 · 김동아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음.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위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 요청은 해당 정보가 게시된 사이트에서 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한 분쟁조정의 신청은 별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피해구제 사이트에서 하도록 되

어 있어 이용자들이 이러한 절차를 쉽게 알기 어렵고 관련 사이트를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 있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면서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공백이 발생함.

이에 명예훼손 정보가 유통된 정보통신망을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삭제등 조치를 한 때에는 해당 조치를 한 사실과 함께 해당 정보를 게재·유통한 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 및 명예훼손 분쟁조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 등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공백 상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제44조의10,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4까지 신설 등).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2항 전단 중 “알려야”를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필요한 조치를 한”을 “제1호의”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
2.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게재·유통한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3. 제44조의12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제44조의10제1항 중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을 “분쟁조정부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을 “그 밖에 분쟁조정부

의 설치·운영”으로,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③ 조정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조정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장에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11(조정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부에 회부된 명예훼손 분쟁조정 청구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강력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또는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조정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분쟁조정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부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조정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4조의12(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명예훼손 분쟁조정의 신청 및 접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13(분쟁조정의 절차 등) ① 심의위원회는 제44조의12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받은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합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분쟁조정부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부는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접수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심의위원회에 건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또는 분쟁조정부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정안이 위법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조정안이 의결된 경우에는 조정안을 작성하고 지체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⑦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제6항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심의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 조정서 정본을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⑧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제7항에 따른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⑨ 그 밖에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14(분쟁조정 거부 및 중지)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당사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분쟁의 성질상 심의위원회에서 분쟁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분쟁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는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6조제5호 중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u>알려야</u>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u>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u> 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 ----- ----- <u>다음 각 호의 사실</u> <u>을 알려야</u> -----. ----- <u>제1호의</u> ----- ----- -----.
<u>&lt;신 설&gt;</u>	1. <u>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u>
<u>&lt;신 설&gt;</u>	2. <u>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게재·유통한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u>
<u>&lt;신 설&gt;</u>	3. <u>제44조의12제1항에 따라 심</u>

③ ~ ⑥ (생략)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  
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  
촉한다.

③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의위원회에 사생활의 침해 또  
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① -----  
-----  
-----  
-----  
-----  
-----  
-----  
-----  
명  
예 훼손 분쟁조정부(이하 “분쟁  
조정부”라 한다)-----  
-----  
-----

② 분쟁조정부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  
-----  
-----.

③ 조정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  
고로 인하여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조정위원의 임기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

④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필요한-----  
-----.

제44조의11(조정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부에 회부된 명예훼손 분쟁조정 청구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조정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강력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

<신 설>

던 경우

3.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또는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조정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조정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분쟁조정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부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조정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4조의12(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신 설>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 그 밖에 명예훼손 분쟁조정의 신청 및 접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13(분쟁조정의 절차 등)

① 심의위원회는 제44조의12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받은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합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분쟁조정부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부는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접수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심의위원회에 건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또는 분쟁조정부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정안이 위법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조정안이 의결된 경우에는 조정안을 작성하고 지체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⑦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제6항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심의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조정서 정본을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 설>

다만, 제6항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⑧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제7항에 따른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⑨ 그 밖에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14(분쟁조정 거부 및 중지)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당사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분쟁의 성질상 심의위원회에서 분쟁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제66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4. (생략)</p> <p>5. 제44조의10에 따른 <u>명예훼손 분쟁조정</u>부의 분쟁조정 업무</p>	<p>3.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분쟁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는 경우</p> <p>② 심의위원회는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p> <p>제66조(비밀유지 등) -----</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분쟁조정</u>부-----</p>
--	--